

2014년 중국 경제 전망과 시사점

요약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을 둘러싸고 7%를 주장하는 개혁론과 7.5%가 적정하다는 성장론 간 입장 대립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과도한 경기부양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강력한 개혁 조치들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개혁 조치 및 각 부문의 성장동력 약화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7.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지방 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로 그간 중국 투자의 주체였던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이 감소
- 작년에 이어 반부패 정책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비 수준이 작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둔화
-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및 위안화 절상, 임금 상승 등 수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수출증가율 상승폭 제한

중국 성장 둔화가 작년보다 심화될 경우,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 또한 중국 내 임금 상승 영향으로 재중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우려

중국 성장 전략 전환에 대응,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신형 도시화 및 환경 산업 분야에 참여 방안 모색
-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중서부 지역 진출 확대, 한·중 FTA 체결을 통해 내수시장 진출 발판 마련

성장과 개혁 사이에서 갈등하는 중국 지도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과 관련, 7%를 주장하는 개혁론자들과 7.5%를 주장하는 성장론자들 간 논쟁

- 7%를 주장하는 쪽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 공급과잉 해결 등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7% 초반의 성장률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국가정보센터 등의 정부연구기관 역시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할 것을 건의
- 한편, 성장론을 주장하는 쪽은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 대졸 취업자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인식
-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실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제시하는 정치적 시그널의 성격이 강하고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의미
-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7.7%로 당초 목표치인 7.5%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과 마찬가지로 1999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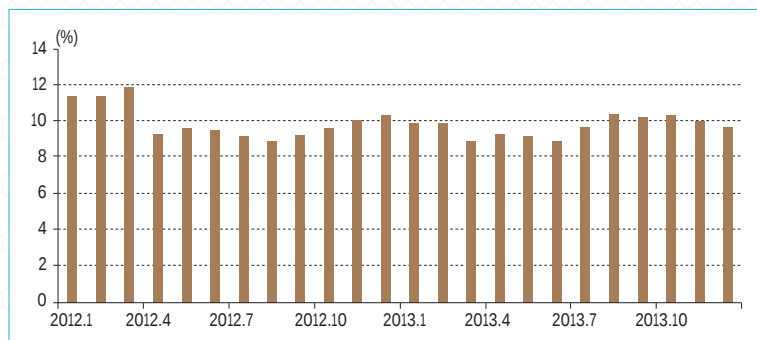
GDP 성장률 목표는 중국 지도부의 금년 경제 운용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GDP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구체적 목표치가 발표되는 3월 양회(兩會)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성장보다 개혁에 방점 예상, 성장 둔화 심화는 불가피

중국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성장 둔화는 감내하겠다는 의지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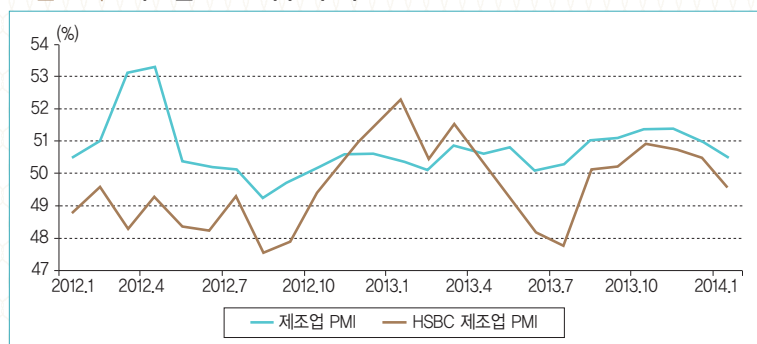
- 중국 사회과학원은 경기 둔화, 부동산 가격 파동, 생산과잉, 금융시장 불안, 지방 정부 부채 등을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 중국 정부는 2013년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와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 관리를 우선 정책과제에 포함시키고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힘.
-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경기부양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존재하며, 경제업무회의에서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
- 리커창 총리는 신규 일자리 1,000만개 창출을 위해서는 7.2%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성장률이 7.2%를 상회하는 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림 1 | 산업생산증가를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2 | 제조업 PMI 지수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산업 구조조정, 강력한 반부패 정책,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시멘트,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바, 여기에 올 1월 HSBC 제조업 PMI가 49.5로 6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조업 위축 우려

*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월 HSBC 제조업 PMI가 전년도 12월 수치보다 하락하여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음을 시사

표 1 | 중국 주요 경제지표 2013년 실적 및 2014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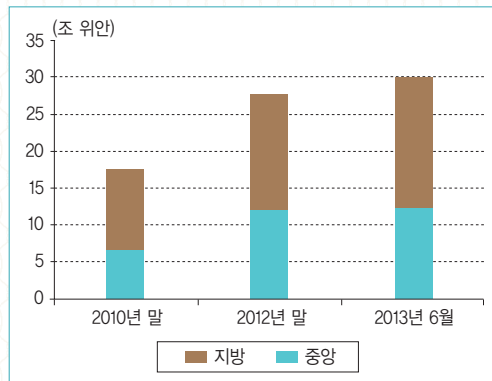
	2013		2014
	계획	실적	전망
GDP(%)	7.5	7.7	7.4
투자(%)	18	19.6	19.0
소비(%)	14.5	13.1	13.0
수출(%)	8.0	7.9	8.0
수입(%)	8.0	7.3	7.5
소비자물가(%)	3.5	2.6	3.0
재정적자(억 위안)	12,000	10,601	13,000
M2(%)	13.0	13.6	13.0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언론자료 종합.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로 투자 여력 감소

그간 중국 투자의 주체였던 지방정부의 투자에 대한 여력과 의욕이 모두 감소하면서 올해 중국 전체 투자증가율은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

그림 3 | 중국 정부 부채 규모



자료 : 중국 심계서.

그림 4 | 지방정부 부채 용도별 지출 현황
(2013. 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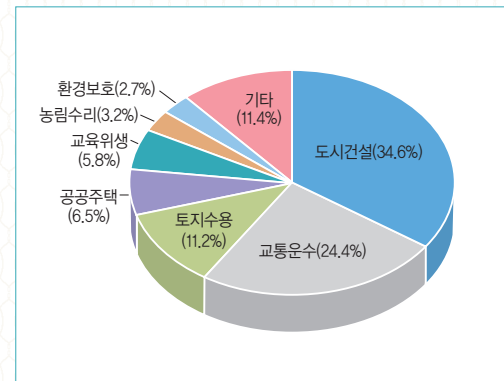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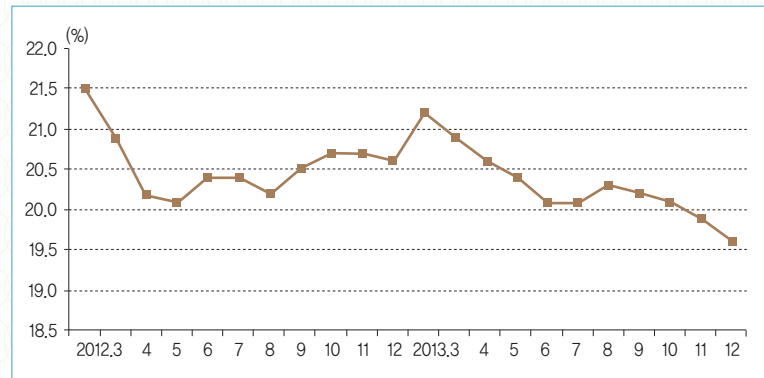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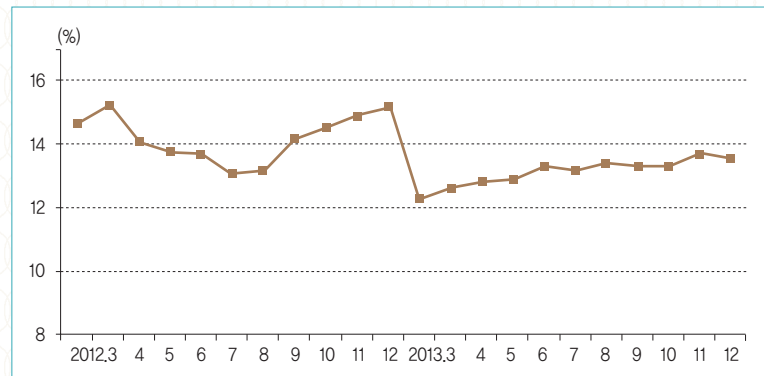


그림 5 |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6 |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심계서(審計署, 감사원에 해당) 발표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17조 8,900억 위안에 달하여 2010년에 비해 약 67%가 증가, 특히 인프라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34.6%)

-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채 관리 강화는 지방정부 부패 척결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 올해 각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평가 시 경제성장률과 같은 양적 지표를 중시하던 것에서 환경, 에너지 소비, 과잉생산 등 질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할 것을 강조, 지방 공무원들의 투자에 대한 열기가 약화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2월 9일 경제전망치를 새롭게 발표하고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예상치를 지난 12월 20.1%에서 19%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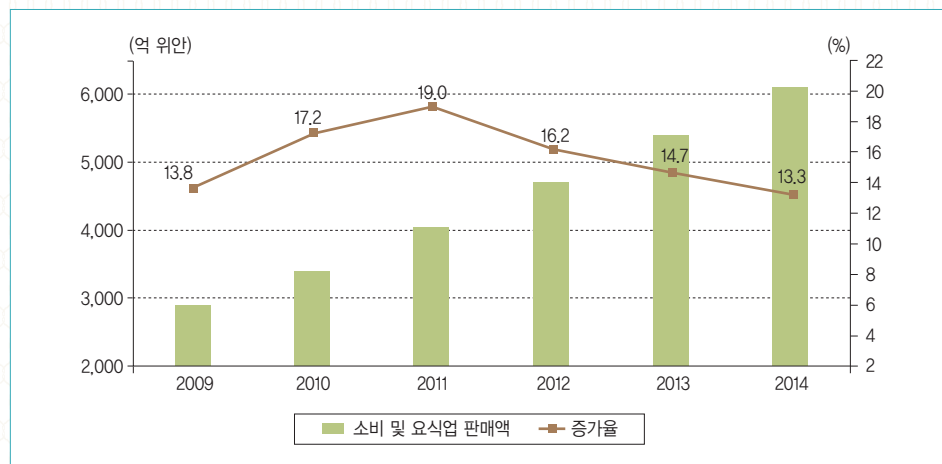
-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총 31개 성시(省市) 가운데 21개 성시가 금년 투자증가율 목표를 작년에 비해 하향 조정

한편 중국 정부는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및 교육, 의료, 판자촌 개조와 같은 민생 분야, 중서부 지역 철도사업,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 핵심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방침

반부패 정책 지속으로 소비 수준은 작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둔화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반부패 정책으로 금년도 소비증가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그림 7 | 춘절 기간 소매 및 요식업 판매액 증가율 추이(2009~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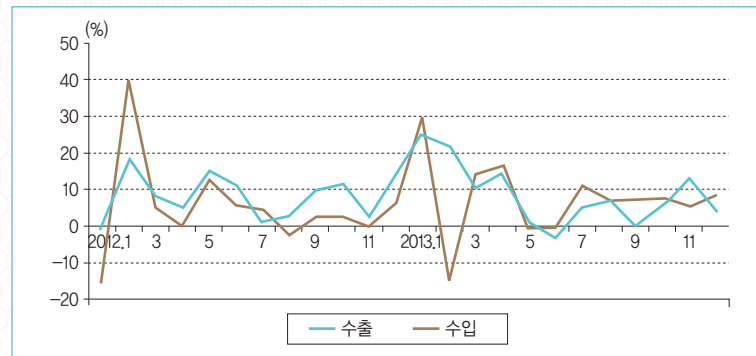
자료 : 중국 상무부 및 중국 언론 보도자료.

- 2013년 소비증가율은 당초 목표 대비 1.4%포인트 낮은 13.1%를 기록, 특히 신지도 부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에 의한 요식업 소비 및 고급 소비재 판매의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
- 올해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겨냥한 소비활성화 정책 및 신형 도시화 추진으로 소비 침체 상황 개선에 나설 전망
- 그러나 지속적인 3공 경비¹⁾ 단속 정책으로 금년 춘절 연휴 기간 요식업 판매증가율이 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올해에도 자동차, 요식업, 고급 소비재 등에 대한 소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수출입: 신흥국 불안 및 수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증가율 상승폭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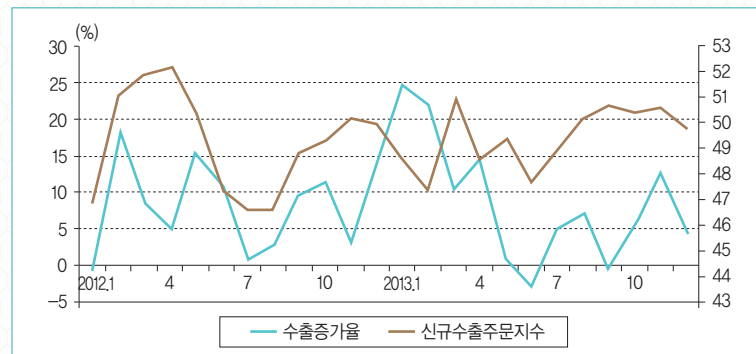
2013년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각각 7.9%, 7.3%를 기록했으며, 교역 총액 증가율은 7.6%로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

그림 8 | 수출입 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그림 9 | 신규수출주문지수 및 수출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1) 3공 경비(三公經費) : 공무해외출장비, 공무접대비, 공무용 차량구매유지비.

-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수요 둔화 및 위안화의 지속적 절상이 수출증가율 감소의 주요인
- 올해에는 유럽과 미국의 경기 회복이 중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경기 둔화 우려, 동남아 일부 국가의 정치 상황 불안 등 신흥국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존재
-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수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신규수출주문지수가 올해 1월 49.3을 기록, 전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
- 중국 증권보(證券報)는 최근 2개월 연속 신규수출주문지수가 확장 기준치인 50을 하회한 것에 대해, 외부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 임금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수입의 경우 구조조정 추진 및 공급과잉 억제로 수입 수요 증가폭의 축소 가능성

2014년 중국 경제는 약 7.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올해 중국 경제는 성장보다 개혁에 초점을 두면서 작년 7.7%보다 낮은 7.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투자·수출 주도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을 꾀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양하고 어느 정도의 성장률 둔화를 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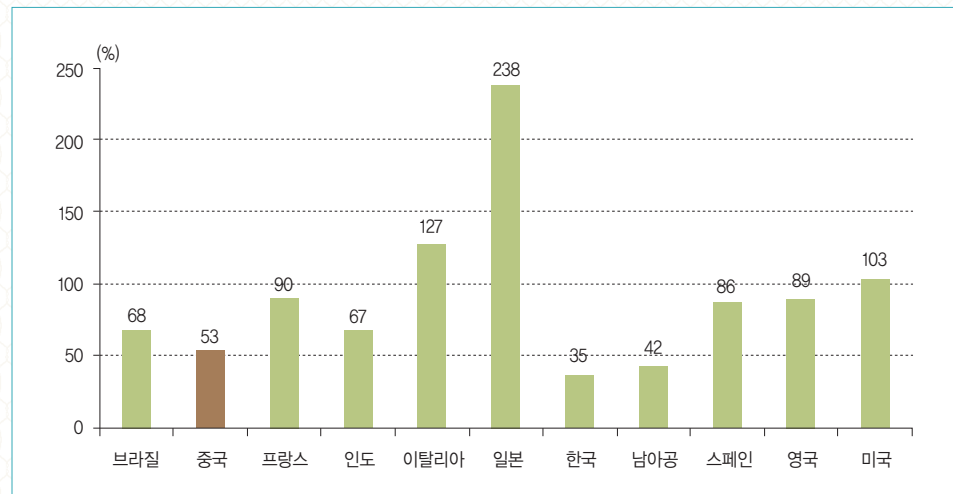
표 2 |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발표일자	2014년 전망
중국	사회과학원	2/9	7.5
	하이통(海通)증권	12/17	7.3
국제기구	IMF	1/21	7.5
	OECD	11/19	8.2
	세계은행	1월	7.7
주요 외신보도	파이낸셜 타임스(FT)	1/20	7.4
	로이터 통신	1/24	7.4
	블룸버그 통신	2월	7.4
주요 투자은행	CITI	1/23	7.3
	HSBC	1/23	7.4
	JP Morgan	1/23	7.4
	모건스탠리	1/23	7.2
	노무라	1/23	7.4
	도이치뱅크	1월	8.6

자료 : 각 기관 보고서 및 언론 보도자료 종합, 무역협회 자료 재인용.

그림 10 | 각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2012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재인용.

-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4%로 제시, 대다수의 투자은행들 역시 금년도 중국 경제가 약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은 7.5%, IMF와 OECD, 세계은행은 각각 7.5%, 8.2%, 7.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올해 중국 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나 그림자 금융 위험은 아직 중국 정부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3년 말 기준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를 은행 자산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46조 위안으로 추정. 그러나 이 비율은 미국 170%, 네덜란드 15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밝힘.
- 한국은행은 중국 중앙 및 지방 부채를 합한 정부 부채의 규모가 여타 국가 수준이나 IMF 권고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
- 중국 정부가 올해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중국 성장 둔화 심화 시 국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에 영향

2013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 해관 통계 기준 8.5% 증가, 중국 수입증가율 7.3%에 비해 양호한 수준

- 특히,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국가로 부상

표 3 | 2013년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 억 달러, %

순위	품목	금액	증가율	기여도
1	전자집적회로	452.5	14.7	45.4
2	액정디바이스	188.3	-7.4	-11.8
3	무선통신기기부품	100.7	20.6	13.5
4	석유제품	79.6	-13.5	-9.8
5	환식탄화수소	75.1	35.8	15.5
6	차량용 부품	33.3	21.5	4.6
7	다이오드, 반도체 디바이스	32.9	-3.7	-1.0
8	인쇄회로	32.8	9.6	2.3
9	비환식 탄화수소	31.9	8.1	1.9
10	컴퓨터	28.2	41.5	6.5
전 체		1,793.6	7.7	100.0

자료 : 한국 무역협회.

주 : HS Code 4단위 기준.

- 2013년 대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기 품목이 작년 대중 수출 증가의 67%를 차지했으며, 반도체(44.4%)와 석유화학 기초원료(17.4%), 무선통신기기부품(13.5%) 등이 대중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
- 2013년 중국의 기계산업 및 전자산업의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 가운데 57.3% 차지, 최대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고 관련 품목의 대중 수출 증가로 이어짐.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6.5%로 미국 11.1%, EU 8.7%, 일본 6.2%를 상회, 사상 최대치 기록

-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 경제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중국 GDP 성장률 1% 포인트 하락 시 우리나라 전 산업 수출에 약 1.3% 감소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²⁾
- 특히,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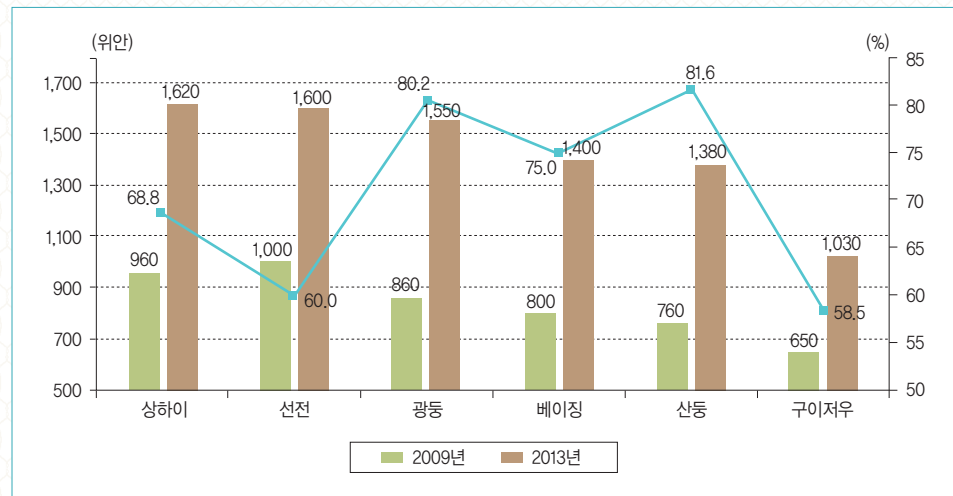
대중 투자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위험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 도시취업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0년 13.3%, 2011년 14.4%, 2012년 11.9%

2) 강두용 외(2013), "중국 성장 둔화의 배경과 전망 및 국내 실물경제 영향",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66호, 산업연구원.

그림 11 | 2009년 대비 2013년 중국 주요 지역 최저임금 및 상승률(월/위안)



자료 : baidu.com, 주중 한국대사관.

- 주요 도시 임금 인상률: 베이징 75%, 상하이 68.8%, 선전 60%, 산둥 81.6%

특히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은 과거 중국을 수출기지로 활용하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진출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

중국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 소비시장 공략, 신형 도시화와 환경 관련 산업에 주목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적극 편승, 성장 시장 공략 필요

-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서비스업 발전, 감세 정책 등을 비롯, 각종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할 전망
-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 형태에 주목, 의료, 교육, 양로 관련 시장 수요 증가 및 에너지 절약형 가전, 통신기기 등의 판매 확대 기대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도시화, 에너지 절감 및 환경산업, 전략적 신흥 산업에 주목

- 스마트 시티 건설, 환경산업 등은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인 형태이므로 중국 지방정부의 여러 관계 기관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 구축 필요

중서부 진출 확대, 한·중 FTA 체결을 통해 내수시장 진출 발판 마련

중국의 성장동력이 동부 연안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 추진

- 한국의 대중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동부 연안지역에 편중(2012년 상반기 기준 교역 92%, 투자 82%)
- 2013년 중국 동부지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8.9%, 중부와 서부는 각각 10.7%와 11.0% 기록,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역시 동부는 17.9%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부와 서부는 각각 22.8%와 23.0%로 동부지역보다 약 5%포인트 높음.
- 중서부 지역은 동부지역 산업의 이전 및 도시화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커 해당 지역 진출을 위한 조사와 전략이 필요

한·중 FTA 협상 시 핵심 사항 관철 필요

- 한·중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외국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때 개별 기업의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허가 규제에 대해 중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적이고 실무적인 지원 마련

이 원 교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wklee@kiet.re.kr
02-3299-3259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